

으로 검색해 준다. 이후 PPL을 할 제품과 광고 종류를 결정하면 미리애드의 전문가들이 CG를 활용해 PPL을 자연스럽게 적용한다.

기존 PPL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제품과 브랜드를 배치했다면, 미리애드의 솔루션은 시간·물리적 제약을 넘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콘텐츠 속에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다.

■ 이노션, 글로벌 미디어 사업 본격화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미국 최대 독립 미디어 대행사와 손잡고 글로벌 미디어 사업에 본격 나섰다.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미국 내 미디어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 최대 독립대행사인 호라이즌 미디어(Horizon Media)사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했다.

1989년 설립한 호라이즌 미디어는 미국 내 6위 미디어 대행사이자 세계 최대 독립 미디어 대행사이다. 이노션은 합자회사 설립으로 연간 4천만 달러(약 476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합자회사는 미국 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미디어 대행, 신규 광고주 개발 등을 맡는다.

이노션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현지 외부 대행사가 미디어 전략기획과 매체 구매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미디어 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 오리콤, 한화 계열 광고회사 ‘한컴’ 인수

두산그룹 계열 광고회사 오리콤이 한화그룹 계열 광고회사 ‘한컴’ 발행 주식 전체를 240억원에 매입했다. 그룹 계열 광고회사 간 주식 매매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컴은 1983년 출범했으며 2014년 업계 취급액 순위 9위였다. 특히 굵직한 스포츠 행사나 국가 행사를 기획·진행하는 등 BTL(Below The Line)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업계 톱10 위치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두 회사의 만남으로 오리콤은 중대형에서 대형 광고회사로 발돋움하게 됐으며, 업계 톱5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컴의 회사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며 독립적으로 경영한다.

오리콤은 이미 광고사업 외에 보그, GQ, W 등 글로벌 패션 미디어 등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즈니스와 브랜딩, 디자인 컨설팅에 특화된 빅앤트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오리콤은 향후 박서원 COO를 주축으로 ‘종합 콘텐츠 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영역의 회사를 발굴, 추가 인수 및 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다.

■ 대형 광고사 쏠림 심화

2014년 국내 광고회사들의 취급액(광고회사가 유치한 광고주의 광고비)은 13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85%는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등 대형 광고회사로 쏠림이 더욱 심화했다.

한국광고총연합회의 ‘2015 광고회사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주요 광고회사 56개사의 취급액은 총 13조6천880억원으로, 전년도 14조1천927억원에 비해 약 3.6%포인트 감소했다.

이 가운데 상위 10대 광고회사의 점유율은 7년째 상승했다. 총액 대비 이들 10개사의 취급액 비율은 85.1%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액수로는 11조6천42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포인트 줄었다. 이들 10대 광고회사의 비율은 2007년 68.4%에서 2008년 72.9%로 오른 이후 증가세를 이어왔다.

제일기획의 취급액이 4조9천2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노션 월드와이드 3조5천988억원, HS애드 1조639억원, 대흥기획 7천444억원, SK플래닛 3천98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TBWA 코리아 2천958억원, 그룹엠코리아 1천646억원, 오리콤 1천542억원, 한컴 1천501억원, 레오버넷 1천4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10개사의 해외 취급액은 총 취급액의 58%인 6조7천970억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광고 취급액의 비율은 2011년 54%를 기록, 국내광고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해 2012년 60%, 2013년 59%를 차지했다. 다소 증감이 있긴 하지만 국내 광고회사들의 글로벌화 정책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학술

■ 개요

2015년에도 학계의 최대 화두는 역사 교과서였다. 수많은 논란 끝에 교육당국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 발행하기로 확정했지만, 진보 학계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여진이 계속됐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학계에서는 저마다 독립 운동가의 생애와 이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뤄낸 해방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이와 함께 일제의 과거사 인정을 촉구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렸다.

학계의 해묵은 문제인 고대사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이 추진하는 ‘동북아역사지도’의 결과물이 공개되면서 고조선의 영역을 두고 이른바 주류 학계의 통설인 ‘한반도 북부설’과 재야 학계의 ‘요서(遼西)설’이 또 한 번 팽팽하게 맞섰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두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학계에서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진보·보수 학계 갈등 ‘절정’

역사 교과서를 두고 수년째 설전을 벌였던 진보·보수 학계 간 갈등은 2015년 국정화 확정을 계기로 절정을 맞았다.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것은 2013년 교학사 사태부터다. ‘우편향’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단 1개의 학교만 채택하면서 끝나는 듯싶었지만, 검정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며 발행체계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

다는 새로운 요구를 불러냈다.

이로 인해 2014년 국정화는 학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고, 1년여 간 지속된 논쟁 끝에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발표했다.

황우여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걱정하는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이후 역사학계는 더욱 들끓었다. 회원 수 700여 명의 국내 최대 역사학회인 한국역사연구회를 비롯해 한국근현대사학회 등 유수의 학회들이 잇달아 국정 교과서 집필을 비롯한 모든 과정에 불참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한국역사연구회는 국정화에 반발해 대안 한국사 도서를 개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연구회는 “이런 상황(국정화)이 올 것을 예상하며 연구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대안 한국사 도서의 개발을 준비했다”며 “우리고 매우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집필·감수·편찬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0월 3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는 28개 학회가 국정 교과서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반대 움직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수 학계에서는 잇단 토론회와 좌담회를 통해 국정화의 긍정적 의미를 조명하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또 대표 저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모두 47명의 학자가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기로 했다.

교과서 개발 업무를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고사 부문 대표 저자였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퇴진하는 일도 발생했다.

출판계에서는 ‘세계의 역사 교육 논쟁’(린다 심콕스·애리 월셔트), ‘교과서를 배회하는 마르크스의 유령들’(김철홍·전희경·김진),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정경희) 등 역사 교과서나 역사 교육과 관련된 도서가 쏟아졌다.

■ 교과서 국정화로 다시 주목 받은 ‘민중사학’

역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서 또 하나 관심을 모은 것이 이른바 ‘사관(史觀)’의 문제다. 학계에서는 국내 사학계에서 상당한 세력을 점하는 ‘민중사학’과 이에 반발하는 측이 정면충돌하면서 교과서 논란을 가열시켰다고 분석했다.

민중사학은 역사발전의 주체가 민중이라는 대전제 아래 민족적·사회경제적 모순 구조를 분석하고 민중의 활동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두는 학문적 경향을 말한다. 국내에 민중사학이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 초 마르크스주의가 확산되고 노동운동·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지면서부터다.

동북아역사재단 배성준 연구위원은 ‘1980~90년대 민중사학의 형성과 소멸’이라는 논문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경험은 ‘민중항쟁의 발발’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기존 학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마르크스 이론을 확산시켰고, 그 과정에서 민중사학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이론으로서의 민중사학은 1984년 12월 이 이론을 표

방하는 최초의 연구단체인 ‘망원한국사연구실’이 창립되면서 하나의 학문으로서 본격적인 틀을 갖춘다.

해직 교수 출신 학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망원한국사연구실은 기존 사학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과학적 방법론이 결여됐다고 비판하면서 민중을 변혁의 주체로 보는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민중사학을 제창했다.

망원한국사연구실은 현실 문제에도 적극 관여하며 ‘학계 율타리’를 뛰어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이들은 1987년 정부의 ‘대한민국사’ 편찬과 국정 국사 교과서 개편작업 착수에 맞춰 민중 주체 역사 서술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망원한국사연구실 이외에도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대사연구회’ 등 민중사학 연구단체가 속속 만들어졌고, 이후 재편 과정을 거쳐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등이 결성되면서 민중사학은 학계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들 학회는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1988년 망원한국사연구실과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일부가 통합돼 만들어진 한국역사연구회는 현재 7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역사학회로 성장했다.

민중사학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론적으로는 소멸의 길을 걷지만, 국내 사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1980~90년대 민중사학의 번영기에 공부한 연구자들, 특히 근현대사 전공자들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견 학자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또 교과서 검정제 시행 이후 민중사학의 영향을 받은 인사들 중 상당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하면서 민중사관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5년 10월 21일 자유경제원 세미나에서 “민중사관으로 훈련된 젊은 역사가들이 교과서 집필의 권력을 취득했다”며 “2003년 검인정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이 문화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민중사관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민중사학이 태생적으로 지닌 반외세·반자본주의적 성향이 교과서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학생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 인식을 심어준다고 지적한다.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역대 고교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단원을 분석한 책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과거에서 현재의 교과서로 우물쭈문 친북·반미 성향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예컨대 5·6차 교과서는 김일성 체제를 ‘독재 체제’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7차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상당수가 독재 체제 대신 ‘김일성 중심의 통치 체제’, ‘김일성 유일 체제’ 등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 교수는 “최근의 국사 교과서가 편향된 이념 성향을 띠는 것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민중사관’에 입각해 기술됐기 때문”이라면서 “국정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누적된 국사학계의 좌편향된 성향이 한꺼번에 분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중사관은 ‘민중사관’에서 나온 하나의 가지에 불과하며 1980~90년대 민중사학의 풍토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모두 좌편향으로 모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민중사관을 가진 ‘좌파’ 학자로 모는 것은 국정화 찬성 측의 ‘낙인찍기’”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일각에선 진보 출판사와 집필진이 ‘카르텔’을 맺고 좌편향 교과서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설사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검정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집필기준을 벗어난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학문적으로 되짚은 광복 70주년의 의미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부터 분단에 이르는 시기를 재조명하는 학문적 움직임이 특히 활발하게 이뤄졌다. 국정 기관은 물론 크고 작은 민간 학회에서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학술대회를 열거나 관련 행사를 준비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은 11월 11일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광복 70주년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역사 관련 국정기관 3곳이 함께 학술대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지식인 500여 명(차 성명 기준)이 5년 만에 일본의 과거사 인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많이 주목 됐다. ‘한국병합 100년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발기위원회는 7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역행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2015년 한·일 그리고 세계 지식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7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병합 100년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발기위원회 소속 양국 지식인들이 ‘2015 한·일 그리고 세계 지식인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 중견학자 700여 명은 8월 10일 ‘올바른 과거청산과 아시아 평화의 확산을 바라는 학자 일동’의 명의로 양국 간 올바른 과거 청산과 진정한 화해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영화 ‘암살’의 흥행 속에서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거나 역사 속으로 잊힌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업적을 되새기는 학술적 시도도 잇따랐다.

항일 무장 독립단체 의열단을 이끌었던 류자명 선생이나 영화 ‘암살’의 주인공 안옥윤과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독립을 향한 여성 영웅들의 행진’ 특별기획전 등이 대표

적이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4월 남·북한 독립운동가 1만6천여 명을 아우르는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편찬에 착수했다. 62억원 예산규모로 진행되는 편찬 사업은 2019년 완성될 예정이다.

■ 다시 불거진 학계의 해묵은 갈등 ‘고대사’

고조선의 영역범위 등 고대사를 둘러싼 학계의 해묵은 갈등은 2015년에도 재연됐다. 2008년 시작돼 8년 만에 종료된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지도’가 촉매제가 됐다.

동북아역사지도는 한사군의 위치를 지금의 평양 지점인 한반도 북부로 표시했는데 재야 학계를 중심으로 해당 지도는 식민사관을 따른 것이며 중국 동북부 요서 인근으로 확장하는 게 옳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사군은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패망시킨 후 설치한 군현을 의미하는데 이 위치에 따라 한국의 고대 국가 영역이 달라진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2015년 8월 발간한 저서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에서 ‘동북아역사지도’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 극우세력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추종한 지도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정부가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서 상고사·고대사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은 고대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켰다.

11월 17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 상고사 대토론회’에서는 ‘한반도 북부설’을 지지하는 주류 학계와 ‘요서설’을 주장하는 재야 학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재야 학계는 중국 역사서 등을 근거로 “고조선의 영역 상한선은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북부에서 라오닝성(遼寧省) 서남부이고, 이를 한반도 북부로 축소한 주류 학계의 주장은 ‘식민사관’을 따른 것”이라고 강하게 공격했다. 반면, 주류 학계는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를 통해 한사군의 위치는 한반도 북부로 이미 결론이 났다”며 반론을 일축했다.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1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별위원회 현장회의에서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라면서 “기획 단계부터 허술했고 집행, 심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지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동북아역사재단은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재단은 학계에서 논란이 된 고조선의 강역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지만, “역사지도의 지도학적 완성도와 연구비 집행의 정당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적발했다”며 결과물에 대해 부실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단은 역사지도 편찬 업무를 수행한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일부 연구비 환수를 통보했다.

그러나 사업단이 조사 결과에 반발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은 “재단이 문제로 삼은 내용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른 시일 내 개선이 가능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해약을 통보해 왔다”고 해명했다.

■ 박유하 재판으로 불거진 ‘학문의 자유’ 논란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에 빗대어 논란이 된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학계에서 ‘학문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불을 지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을 출간했다.

박 교수는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했고, 이옥선 할머니 등 9명은 이 같은 문구 34개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4년 7월 냈다.

재판은 2015년 내내 진행됐고, 2016년 1월 1일 서울동부지법은 이 책이 위안부 할머니 9명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원고에게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학문적 자유·표현의 자유보다는 생존 인물에 대한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학계는 비교적 해석의 차이에 관대한 편이었던 만큼 파장도 컸다. 앞서 ‘제국의 위안부’가 기소됐을 당시 지식인 192명은 “국가가 원한다면 위안부 문제를 넘어 역사 문제 일반과 관련해서도 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민주적 관례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자유와 방종은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해석이나 의견의 영역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부딪혔다.

■ 학술 논문 키워드는 ‘삶의 질’

2015년 학술계의 최대 관심사는 ‘삶의 질’이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물인터넷’, ‘핀테크’, ‘드론’ 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잇달았다.

지식콘텐츠 전문기업 ‘누리미디어’에 따르면 2015년 학술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 사이트 ‘DBpia’에 실린 논문 9만3천여 편 중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은 1천300여 편으로 집계됐다. 이용자가 내려 받은 삶의 질 관련 논문 편수도 2만6천여 건에 달했다.

스트레스, 우울 등이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넘어서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행복한 삶이나 치유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학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이용한 논문은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서문기, 한국사회학 제29집 1호), ‘힐링(Healing)의 개념분석’(김지영 외, 중용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이었다.

사물인터넷, 핀테크(fintech·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드론 등 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대두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키워드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커졌다.

사물인터넷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정보통신(IT)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 수(610편)와 다운로드 수(2만여 건)를 기록했다. 핀테크는 발표된 논문은 23편에 불과했지만, 다운로드

수는 7천500여 건에 달해 학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드론의 발표 논문은 90편, 다운로드 수는 4천400여 건이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2015년 1주기를 맞은 세월호에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메르스 관련 논문은 41편, 세월호 관련 논문은 70여 편이나 발표됐다. 이들 이슈는 모두 다운로드 수가 4천여 건이 넘었다.

과학기술

■ ‘이제는 달로 간다’ 한국우주개발 새 도약

한국 기술로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을 2018년 쏘아 올리는 사업이 가동됐다. 2013년 1월 위성 로켓인 나로호의 자체 발사 성공 이후 한국 우주 개발의 목표를 ‘달 탐사로 한 차원 더 높게 끌어 올리는 시도라 주목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2018년 말까지 시험용 달 궤도선 1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부터 1천978억원을 투입하는 달탐사 1단계 사업을 본격적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2016년 예산 200억원이 배정됐다. 애초 계획된 금액보다 100억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규모다. 2014년에는 2015년 예산으로 410억원이 책정됐다가 국회에서 ‘꼭지 예산’ 논란으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달탐사에 참여하는 국내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은 2013년 ‘출연연 달탐사 협력협의회’를 구성, 자체 예산을 투입해 달탐사선·탐재체·심우주지상국·로버 등 4개 분야, 21개 세부 과제의 융합연구를 해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와 함께 2020년에는 달착륙선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제작한 로켓으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1단계 목표인 발사체 예비설계, 엔진 시험설비 구축, 7급 액체엔진 조립 및 점화·연소시험을 마치고 2015년 8월 2단계 사업에 돌입했다.

2단계 사업에서는 국내 주도로 75급 액체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1.5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300급 3단형 발사체를 개발한다.

2018년 발사될 달 궤도선에는 외국 발사체가 사용되지만 2020년 달착륙선은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한다. 그러나 달착륙선 발사는 2단계 사업에서 개발할 300급 3단 로켓으로는 부족하다.

3단형 한국형 발사체는 1.5급 위성을 약 700km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수준이어서 맨 위에 1단형 로켓을 추가해 4단형 발사체를 개발해야 탐사선을 달로 가는 비행궤도에 올릴 수 있다.

달탐사선이 4단 로켓에서 분리돼 달 궤도에 진입하면 한국은 미국·러시아·유럽·중국·인도·일본에 이어 7번째로 달에 탐사선을 보낸 국가가 된다.

최기혁 달탐사연구단장은 “선진국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달탐사를 시작되게 됐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다. 한국